

건설동향브리핑

제459호 (2014. 4. 28)

■ 경제 동향

- 서울 주택시장, 주택 매매 수요층 확대 중

■ 정책 · 경영

- 정부 규제 완화 정책 수단의 주요 내용
-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하자 책임자 실종 우려

■ 정보 마당

- 3D 프린팅 : 생산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는 첨단 기술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타산지석, 건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서울 주택시장, 주택 매매 수요층 확대 중

- 공적 자금 비중 줄고 예금은행 늘어, 수요층 확대 속도는 지연될 듯 -

■ 2014년 2월 가계대출, 대부분의 용도 및 취급기관에서 증가

- 2014년 2월 가계대출은 대부분의 용도와 취급기관에서 증가세를 보임.
 - 2014년 2월 현재,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비 3.0조원이 증가한 688.1조원임.
 - 전월에 감소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됨.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비 1.8조원이 증가한 419.8조원으로 나타났고, 기타 대출은 전월비 1.2조원이 증가하여 268.3조원을 기록함.
 -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에서 전월비 1.8조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 전월비 1.1조원이 각각 증가함.
-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가계대출이 증가함.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수도권 가계대출은 전월비 1.5조원, 지방은 1.4조원이 증가하여 유사한 증가세를 보임.
 -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1.2조원, 경기에서 0.4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서울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인천은 0.1조원이 감소함.

■ 서울 지역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많아

-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은행의 증가액이 많고, 주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서울과 대구에서 크게 증가함.
 - 취급기관별 증가액은 예금은행 1.2조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0.6조원임.
 -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0.8조원, 대구·충남·경기에서 각각 0.2조원, 경남·세종시·경북 등에서 각각 0.1조원 규모로 증가함.
- 서울은 리스크가 적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주로 증가하였으나, 부산과 경기에서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증가액이 많음.
 -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2조원 중 0.7조원이 서울에서 발생함. 대구, 충남, 경남, 세종시에서 각각 0.1조원 규모의 증가세를 보임.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의 증가액 0.6조원 중 대구, 부산, 경기 등에서 각각 0.1조원이

증가함.

- 지방은 서울에 비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의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향후 소비자의 금융 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전월비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014. 2월)>

(단위 : 조원)

예금은행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22	0.74	-0.02	0.08	-0.15	-0.03	0.04	0.04	0.0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0.03	0.03	0.14	0.02	-0.03	0.04	0.08	0.01	0.11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0.58	0.03	0.10	0.11	0.01	0.02	0.05	0.02	0.0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0.01	0.01	0.02	0.03	-0.05	0.06	0.04	0.01	0.00

자료 : 한국은행

■ 공적자금 증가액 비중 크게 감소...전년비 절반 수준인 20.5%

- 2014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공적자금 증가액의 비중은 20.5%로 감소함.
 -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인 기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비 0.3조원 감소함.
 - 전년엔 크게 확대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공적자금의 비중은 20.5%(전년비 2014년 2월 기준)로 낮아짐.

※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공적자금 대출의 비중 : 2010년 8.8%, 2011년 8.2%, 2012년 50.6%, 2013년 46.9%

■ 서울 주택시장, 금융 리스크 적은 수요층 중심으로 참여 확대 중

- 서울은 금융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수요층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 전년 동월비 서울의 주택 거래량 증감률 : 1월 235.2%→2월 131.6%→3월 66.6%
 - 또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공적자금의 비중은 감소하고, 예금은행의 비중이 확대됨. 이는 주택 구입자의 소득 및 구입 주택 가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발표(2014. 2. 26) 이후 투자 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하여 수요층 확대 회복 속도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정부 규제 완화 정책 수단의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의 규제총점관리제 도입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

- 정부는 종전의 규제 만능주의적 정책 프레임에 대한 반성과 경제 성장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지난 2월 25일에 발표함.
 - 이번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규제 완화의 정책 수단으로 ‘규제총량제’와 ‘자동효력상실제’의 도입·확대를 제시함.
- 규제총량제는 기업의 활동에 부담을 주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임.
 -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비용을 공개하고, 규제에 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며 점차 축소하려는 취지임.
- 자동효력상실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일몰제의 한 수단임.
 - 규제일몰제는 존속 기한 경과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형’과 일정 주기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재검토행’ 일몰제로 구분됨.¹⁾
 - 자동효력상실형이 재검토행보다 강력한 형태임.

■ 국토교통부, 7월부터 규제총점관리제 시행

- 범정부적인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규제정보포털(2009~14)에 의하면, 지난 5년 간 정부 부처 중 국토교통부에서 등록 규제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는 특히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규제 건수의

1) 효력상실형 예시 : “OO법 부칙 제O조 : 제XX조의 개정 규정은 201X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재검토행 예시 : “OO법 시행령 제O조 : OO부 장관은 제XX조의 규정을 201X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총량도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의 경우, 이 기간 동안 2,052건에서 2,443건으로, 391건이나 급증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약 78건의 규제가 신설되었음을 의미함.
- 따라서, 단순한 규제 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및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규제총점관리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기로 함.
 -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의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²⁾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 강도³⁾와 적용 범위⁴⁾를 고려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함.
 - 각 규제의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여 영향력(체감도)이 큰 규제⁵⁾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함.
 - 또한, 규제 폐지 외에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의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함.

■ 단기적 추진 과제만 제시하는 것은 지양... 범부처 차원의 접근 필요

-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 체감 우선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에는 ①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의 폐지, ② 녹지·관리 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③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④ 자동차 튜닝 규제의 완화 등이 포함됨.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총점을 실제 감축할 수 있는 단기적 추진 과제들만 주로 열거하는 경향이 있음. 즉,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와 이미지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상존함.
 - 규제총점관리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완화)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배점을 높이고, 범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건설산업 내에서도 부처별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건설산업 규제 개혁과 실행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2) 경제적 규제(① 입지, ② 진입, ③ 거래, ④ 가격, ⑤ 품질 규제), 사회적 규제(⑥ 환경, ⑦ 사회적 차별), ⑧ 행정적 규제

3) 특허, 인허가>신고>등록 등 절차적 사항, 전면 금지>일반적 금지>일부 금지>대부분 허용 등 내용적 사항

4) 규제가 적용되는 시설물, 지역, 기업 등의 해당 범위

5) 입지·진입 규제>거래·가격 규제>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행정적 규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하자 책임자 실종 우려

-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 업종으로 분류하고, 하도급 저가 심의 강화해야 -

■ 외국에선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사례 거의 없어

- 최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음. 이 건은 이미 과거에도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장점보다는 폐해가 더 큰 것으로 판정되어 매번 보류되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 이유는 공사 관리 및 하자 책임자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방화 셔터나 스프링쿨러 공사는 배관공사나 건축시설 공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복합 공정 간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됨.
 - 만약, 소방설비공사가 분리되어 지연 시공이나 공종 간 간섭 현상 등으로 총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공기 지연에 대한 페널티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
 - 또한, 스프링쿨러나 화재 감지기의 설치 이후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재시공이나 보수 공사를 할 경우, 천정이나 연관 설비를 제거하고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천정이나 연관 설비의 재시공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
- 분리 발주가 이루어질 경우, 종합건설업체는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맺어온 소방공사업체를 배제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소방공사업체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이 경우 의사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생산성과 품질 확보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짐.
- 소방설비업체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기공사 등의 분리 발주는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으로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대표적인 건설 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제도임.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무조건 분리 발주를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5개 주 정도에서 분리 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골조나 구조체 공사와 관계된 공종은 분리 발주를 허용치 않고 있으며, 하자나 공정 책임이 분리될 수 있는 공종에 국한하고 있음.

- 특히, 미국 뉴욕주에서는 1912년에 제정된 *Wick's Law*에 근거해 전기공사 등의 분리 발주를 허용하고 있는데, 2008년 *Wick's Law*의 대상 공사를 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이상으로, 2013년 300만 달러 이상으로 높여 분리 발주 허용 범위를 크게 축소한 바 있음.

■ 소비자 입장에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하자 책임자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

- 본질적으로 소방설비공사의 분리 발주를 업역 다툼의 문제로 한정하여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소비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소방공사 분리 발주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성실하고 기술력 있는 소방설비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종합건설업체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소방설비업체는 대부분 정예 멤버로 볼 수 있으나, 분리 발주시에는 공공 입찰의 문턱이 낮고 입찰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수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
 - 분리 발주가 강제되고 있는 전기공사의 예로 볼 때, 입찰 경쟁률이 1:500에 달하고, 운찰제로 인하여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하고, 부실 업체의 공사 수주를 방지하기 어렵게 됨.
 - 결과적으로, 소방공사의 분리 발주는 시장 메커니즘을 소멸시키고, 업종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건설시장의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위배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 담보 책임의 측면에서도 분리 발주는 취약성이 있음.
 - 소방공사는 영세 업체가 많으며, 10년 기업 존속률은 15% 내외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 후 부도, 폐업 등으로 하자 보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또, 이러한 영세 업체가 장기적인 기업 비전을 갖고 성실 시공에 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 소방설비업체가 분리 발주를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보다 하도급 시공 과정에서 저가 하도급이 많다는 것인데, 이는 공사 발주 체계를 왜곡하여 해결하기보다는 하도급 규정을 보완하거나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방설비공사에서 저가 하도급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소방설비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사로 취급되지 못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한 하도급 저가 심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의 사례 등으로 볼 때 소방공사를 법적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저가 하도급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판단됨.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3D 프린팅 : 생산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는 첨단 기술¹⁾

- 기존 건설 기자재 및 공법의 한계를 해결하는 새로운 도구로 주목 -

■ 3D 프린팅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 3D 프린터 가격은 하락세

- 3D 프린팅은 1983년에 미국의 발명가 척 홀(Chuck Hull)에 의해 개발된 이후, 최근 관련 융합 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다양한 분야와 용도에 활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임.
 - 3D 프린터란, 3차원 설계도면 디지털 파일을 읽고 성형하기 쉬운 재료를 투입하여 3차원의 물체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자동화 생산 기기임.
 - 3D 프린팅 산업은 2014년에 가장 주목받는 산업으로 꼽힐 만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0만 달러 이하의 3D 프린터 시장은 2013년에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였고, 올해는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D 프린터의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 출시된 최소형 3D 프린터는 1,375 달러면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있음.
- 3D 프린팅은 새로운 차원의 산업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부각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제품의 개발 및 제품 복원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음.
 - 3D 프린팅 기술은 기성 부품의 대량 생산 및 공급 체계를 대체하여 오픈 소스 디자인을 활용한 최적 맞춤 설계와 실시간 제작으로 부품 조달의 효율성을 배가시킴.
 - 또한, 다품종 소량 부품이 다수 요구되는 산업계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보잉사의 경우 300여 개의 비행기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있음.
 - 인공 뼈나 신체 조직을 생산할 수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도 실용화 단계에 근접하여, 지난해 미국의 코넬 대학은 인간의 인조 귀 생산에 성공하였음.

■ 건설 분야에서의 국내외 적용 사례

- 건설 분야에서는 그동안 3D 프린팅 기술이 모형 제작이나 연구 개발 차원에서 시도되었으나, 최근에는 실물 크기의 시설물 생산 수준에 이룸.
 - 프랑스에 건설 중인 국제열핵융합실험로 사업에서는 데스크 톱 3D 프린팅 기술을 적

1) 본고는 Lyndsey Gilpin의 "10 Facts on 3D Printing : Understanding Tech's Next Big Game-Changer"(www.techrepublic.com, 2014. 2), 문현석의 "3D Printer-건설 생산 방식의 혁신"(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2014. 4) 등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용하여 설비의 설계 및 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중국 상하이의 건설기업은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여 콘크리트 조립 주택 10채를 단 하루 만에 완공하였는데, 투입된 비용은 주택 1채당 4,800달러에 불과하였음.
- 미국 대학의 연구팀은 섬유 보강 시멘트를 재료로 콘크리트 구조체를 시공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탑재한 건축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20시간 내에 주택 1채를 완성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임.
- 네덜란드의 건축기업은 600만 달러를 투입하여 D-Shape이라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실물 크기의 건축물을 2014년 말까지 완성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국내 건축 모델링 기업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용산 지구 개발 사업 계획안의 축소 모형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나, 실척 규모의 시설물 건립은 시도된 바 없음.

■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 기존의 건설 기자재와 공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생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향후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 건축물의 시공은 기성 자재와 기존 공법으로는 난해한 경우가 많은데, 3D 프린팅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이 될 수 있음.
 - 피난민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의 단기 시공 상황, 초고층 빌딩, 또는 초장대 교량과 같은 고소 작업의 위험한 환경에서 무인 시공 분야, 도로 포장의 포트 홀(Pot Hole)의 급속 보수 작업과 같은 유지관리 분야 등에서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3D 프린팅 기술은 향후 시설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업무 수행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 건설용 3D 프린팅 로봇, 3D 스캐너 등의 관련 하드웨어와 지원 소프트웨어의 개발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기반으로 건설 생산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작업 등이 요구됨.
 - 참고로 미국 건축가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는 3D 프린팅 기술의 개념, 원리, 활용 등을 소개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임.

김원태(연구위원 · wontk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4. 2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공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관련 토론 등
	새만금개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통합 사업 관리 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통합 사업 관리 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한 자문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재해 피해 예측 및 저감 연구 개발 사업 연구 결과 평가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윤영선 연구위원 참여 - ‘방재 개념을 고려한 사회 분야별 기술 정책 프레임 워크 개발 연구’ 평가
4. 22	청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금융비서관실 주최,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실 김현아 실장 참여 - 부동산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4. 24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국 주최, ‘종합심사제 시범 사업 평가 및 점검 TF 1차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참여 - 종합심사제 시범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각 발주기관의 입찰자 평가 방안에 대한 검토
4. 25	건설산업비전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명성위원회 제3차 본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손태홍 연구위원 참여 - 건설 투명성 지수 개발 논의
	경기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담당관실 주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조례 제정 간담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 「리모델링 제도 및 사례 소개와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4년 5월 9일(금) 14:00~17:00
- 장소 : 서울무역전시장(SETEC) 1전시관 2층 컨퍼런스룸
- 주최 : 한국경제
- 주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서울시 인프라 투자 정책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4년 5월 12일(월) 14:00~17:00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타산지석, 건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올해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에는 바다에서 대규모의 배가 침몰하는 일이 벌어졌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고 당시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조타실을 맡았다는 점이다. 물살이 거센 해역을 통과하려면 돌발적인 위기 상황의 발생이 예견되므로 응당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축적한 베테랑이 조타를 맡았어야 했다. 이것은 상식이자 기본이자 원칙이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전문가가 했어야 할 일을 ‘아무나’에게 맡긴 셈이다. 더욱 아연실색케 한 것은 승객은 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의 태도다.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선장이라는 직업인의 자세는 아니다.

건설 현장은 어떠한가? 얼마 전 남대문 복원에 참여한 목수들의 자격 시비가 있었다. 관련 자격을 대여하여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양반이다. 거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기능인력은 ‘아무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되다보니 그 값은 헐값이 되고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안전 교육 이수나 건설에 대한 이해도 없는 불법 취업자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수주 경쟁으로 부족해진 공사비를 만회하려니 무리한 공기 단축을 시도한다. 추락을 막는 안전 고리를 묶는 것조차 작업 속도를 늦춘다며 ‘사치스러운 행위’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루 800장을 쌓아야 할 작업을 날림으로 1,600장씩 쌓으려니 사람은 굶고 품질은 떨어지며 부실 위험은 커진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불만이 쌓이고 사기는 곧두박질친다. 근로자들 중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나 시간에 쫓겨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것은 나의 직업이 아니고, 잠깐 돈 벌러 왔다’면서 평생을 일하는 근로자도 많다. 장인 정신을 지닌 숙련인력에게는 꼼꼼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려는 사람에게는 ‘조상의 장인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 이럴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상식이자 기본이자 원칙은 잘 지켜져 왔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건설산업에서는 ‘제 값 받아 제대로 시공하고 제 값 주는 것’이 상식이고, ‘사람이 재산이고 장인 정신을 담는 것’인 것이 기본이며, ‘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과 기본과 원칙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만 건설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면서 건설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영화 속에서와 같은 기적의 장면이 아직 남아 있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건설경제신문, 2014. 4. 21>

심규범(건설산업연구실장 · gbshim@cerik.re.kr)